

현안과제연구

# Issue Report

2016. 07. 30

## 충남도 2017년 도정 10대 아젠다 발굴

송두범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dbsong@cni.re.kr](mailto:dbsong@cni.re.kr)

강수현 :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sh3737@cni.re.kr](mailto:sh3737@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충남 도정의 주요 아젠다를 연구원 차원에서 파악하여 선도적인 도정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음.

### 요 약

#### CONTENTS

##### 〈요 약〉

1. 시작하며
2. 분석방법과 절차
3. 2017년 국내외 도정 여건
4. 2017년 도정 아젠다 도출
5. 결론 및 제언

- 2017년은 민선6기 4년차로 도정의 성과를 가시화 및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임
  -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을 종합점검하여 정상추진중인 시책은 잘 마무리하고, 미진한 시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먹거리인 미래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가야 할 것임.
  - 도정시책은 성과가 분명한 물리적 사업도 있지만, 3농혁신 등과 같이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책도 상존하는 바 단기적인 평가에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해가야 할 것임.
- 연구원내 연구진과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48개의 아젠다 후보군과 10개의 아젠다를 선정함
  - 9개 분야에서 48개의 아젠다 후보군을 도출한 후 전문가 검토·평가를 통해 10개의 아젠다를 최종 도출함
  - 10개의 아젠다는 ①생태/문화에코뮤지엄 추진, ②시/군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③과소/고령마을 대책 마련, ④교육상생/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⑤수소밸리 구축 전략, ⑥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구조 개편(리노베이션), ⑦안전한 통학로(생활도로)시범사업, ⑧해양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 ⑨해량레저관광 기반 조성, ⑩서산/당진 교부가 소재산업 육성임
- 2017년은 미래 먹거리 발굴관련 아젠다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반이 되는 신성장동력, 환경, 생태, 해양, 마을(교육)공동체, 에너지 관련 아젠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민선6기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충청남도는 중장기적인 아젠다는 연차별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창의적인 도정과 도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단기적인 아젠다 발굴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황으로 변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충남도는 지방자치단체중의 하나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과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해 왔던 많은 사업들을 새로운 눈으로 성찰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석탄화력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에너지 정의문제, 갯벌을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 등이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연구원의 시각에서 2017년 충청남도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충남의 주요여건 및 전망을 통해 2017년 충남도정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함.

## 분석방법과 절차 ◀

# 02

- 2017년 도정아젠다 도출을 위해 충남연구원의 각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후보군들을 발굴하고 부서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하였음.
  - 2017년 도정아젠다는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발굴하였음.
  - 환경생태에너지, 농어촌·농어업, 행정, 사회복지, 지역도시, 교통물류, 산업경제,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미래전략 등임.
- 9개 분야별 아젠다 후보를 발굴한 다음, 시의성과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등을 10간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 다음 평균점수를 부여하였음.
  - 해당분야별 아젠다 후보를 해당부서 연구진들이 평가하는 절차를 거쳤음.

###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 선진국이 바라본 미래 트렌드와 리스크(기획재정부, 2012)

◇ EU(27개국) 및 영국, 싱가포르 등 8개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전략보고서에서 ①글로벌 경제, ②인구구조 변화, ③기후변화·에너지 고갈 등을 핵심 미래 트렌드로 제시

- 경제의 글로벌화 : 신흥국 부상, 불완전 글로벌 금융시스템

#### < 경제 글로벌화의 기회·도전 >

- 기회요인 : EU·미국 등 전통적 교역대상국 뿐 아니라 신흥국의 부상으로 신 시장이 등장하여 교역·투자 기회가 크게 증가
- 도전과제 : 개발도상국과 경쟁, 대외 충격으로부터 취약성 증가

- 인구구조 변화 : 인구증가, 저출산 및 고령화, 신흥국 부상, 불완전 글로벌 금융시스템

#### < 인구구조 변화의 기회·도전 >

- 기회요인 : 중국,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 확대, 실버·레저 등 새로운 산업 성장 가능성
- 도전과제 : 복지·의료 지출 증대, 식품가격 상승, 외국인력 유입, 다문화 사회 통합

- 기후변화/자원 및 에너지 고갈 :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곡물파동, 물부족 야기, 에너지수요 지속증가로 가격급등, 화석연료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 증가

#### < 기후변화의 기회 · 도전 >

- **기회요인** : 지속가능 경제구조 전환, 신재생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 새로운 산업 성장
- **도전과제** : 식량 · 자원확보 경쟁, 산업 생산력 저하

#### ● UN밀레니엄 프로젝트(Millennium Project)<sup>1)</sup>의 15대 지구적 도전과제 선정 (2008)

-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
- 깨끗한 식수획득
- 인구증가와 자원배분의 균형
-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순수 민주주의의 확산
-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결정
- 세계적 ICT융합
-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윤리적 시장경제 확산
- 신종전염병 확산
-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 국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신 안보정책
- 여성지위 향상
- 에너지 수요관리
-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
- 윤리적 정책결정

1)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구인 WFUNA(The 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가 추진하는 미래전략연구 프로젝트로 UNDP, UNESCO 등의 재정지원 하에 1996년부터 국제미래전략그룹(The Futures Group)과 유엔대학교(United Nations University)가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50여 개국 1,500여명의 미래전문가·학자·CEO들이 동참

● 2016년 다보스포럼의 대안은 ‘제4차산업혁명의 이해’ 임.

-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목표이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임을 강조
-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틱스, 나노기술, 3D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

● 2016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순위	2016년 상위 10대 글로벌 리스크	
	가능성 측면	영향력 측면
1	난민위기	기후변화 대응 실패
2	기상이변	대량살상무기
3	기후변화 대응 실패	물위기
4	국가간 갈등	난민위기
5	자연재해	에너지 가격 충격
6	국가통치구조 실패	생태계 파괴
7	실업/불완전 고용	재정위기
8	데이터 범죄	전염병의 확산
9	물위기	자산버블
10	부정거래	심각한 사회적 불만

자료: World Economic Fourm, The Global Risk Report 2016.

● 세계은행의 2017년 세계경제 전망 및 대응방안(World Bank, 2016)

- 세계경제 전망 :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PPP환율(구매력평가지수)기준으로 1월 3.8%, 6월 3.6%로 전망함(글로벌 금융불안, 지정학적 위험부각 가능성, 신흥국의 경기둔화 가속화 및 민간부채 취약성 등의 리스크에 기인)
- 대응방안
  -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 투자자들의 정책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
  - 인프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산업구조 다각화, 무역장벽 완화 정책 등에 중점
  - 취약국을 위한 국제안전망 강화, 국제기구를 통한 인프라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등 국제공조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KDI경제전망, 2016 상반기)

-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되었으나, 추가적인 둔화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수출(물량)은 글로벌 투자위축과 대외경쟁력 저하로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물량)도 내수의 개선추세가 약화된 데 기인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1%내외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파트 매매가격 상승제도 금년 들어 0%내외로 축소되며 부동산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
-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 성장세가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둔화되고 하방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추가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러한 가운데 대내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단기적인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

## 2) 충남의 주요 여건 및 전망

● 2017년은 민선6기 4년차로 도정을 가시화 및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임

- 2017년은 민선6기 4년차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는 도정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임.
-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을 종합 점검하여 정상추진중인 시책은 잘 마무리하고, 미진한 시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먹거리인 미래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가야 할 것임.
- 도정시책은 성과가 분명한 물리적사업도 있지만, 3농혁신 등과 같이 긴호

흡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책도 상존 하는 바 단기적인 평가에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해가야 할 것임.

- 2016년 총선에서 공약사항으로 반영된 시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총선 당선자들의 계속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당선자들간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공약리스트를 종합관리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함으로써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야 할 것임.
- 2017년은 충남도의 중점 추진과제인 『충남경제비전 2030』의 비전인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경제(사람을 행복하게, 지역을 가치 있게)”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시기임.
  - 100대 중점추진과제와 3대 선도프로젝트(아산만프로젝트, 청색산업 육성프로젝트, 행복공동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충남경제비전 2030을 위해서는 도 및 시군뿐 아니라, 도 산하기관, 민간, 기업 등이 로드맵을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충남이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환황해프로젝트는 “아시아 평화공동체” 및 “환황해를 주도할 전략과제 발굴”를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정하고, 외교전략, 인프라구축, 투자 및 통상, 관광마케팅 등에서 황해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최근 대통령이(2016년 4월 26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력발전소이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이후, 충남도에서는 충남도내 입지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3) 국내외 및 지역 여건 분석의 시사점

- 2017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불안, 지정학적 위험부각 가능성, 신흥국의 경기둔화 가속화 및 민간부채 취약성 등의 리스크에 기인하여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한 한·중·러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있지만, 2017년에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개성공단 폐쇄 및 사드배치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충남도와 중국간 산업활동 및 교류 협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역시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결정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 있음(충청투데이, 2016.7.14.).
  -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해 지원되는 지역발전특별보조금으로 충남의 지원금액이 하위에 머물고 있음(2015년 기준).
  - 이를 충남의 역량부족이라고 보는 시각(충청투데이, 2016.7.14. 사설)도 있어 낮은 지역력(地域力)<sup>2)</sup>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지역력 이론의 핵심 포인트)

- ① 주민이나 조직이 지역의 공공성, 사회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또는 협력하면서 지역과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힘
- ② 지역력은 조직화력, 자치력, 협동력, 혁신력의 복합적 능력
- ③ 지역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속적 지역발전이 가능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림 ] 지역력의 구성요소

2) 지역에 있어 신뢰관계나 호혜성의 규범을 갖는 다양한 주민이나 조직의 네트워크가 지역의 공공적, 사회적 과제에 관심을 갖고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또는 협동하면서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힘

- 2017년은 민선6기 마지막 해로 도정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점이며, 2017년 12월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수도권규제완화 공약, 지방자치(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공약 등에 대한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 충남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충남도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2017년은 민선6기 마지막 해로 도정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점임.
  - 현재 일부 개발 사업이 미진한 가운데 총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개발이 슈가 부각될 전망
  - 정책 선도를 통해 정치 일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총선을 도민 의 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2016년 충남 도정 아젠다 도출 ◀

### 1) 도정 의제 후보군 도출

● 충남연구원의 연구진을 대상으로 2017년 도정 아젠다 후보군을 파악(상세내용은 부록 참조)

- 발굴 결과, 환경생태에너지 10건, 농어촌농어업 어업 11건, 행정 3건, 사회복지 3건, 지역도시 4건, 교통물류 2건, 산업경제 5건, 사회적경제 2건, 문화관광 3건, 교육 1건, 미래전략 4건 등 총 48건임.

분 야	건수	아젠 후보 제목	비고
환경생태 에너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문화에코뮤지엄 추진</li> <li>• 시군 에너지전환계획 수립</li> <li>• 충남 에너지전환센터 설립</li> <li>• 환경부담금 제도 개선</li> <li>• 지역주도적 육상생태계 보전/관리</li> <li>• 자연발생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피해 예방관리</li> <li>• 라돈에 의한 주민건강 피해예방/관리</li> <li>• 충남형 환경보건DB구축</li> <li>• 탄소상쇄사업 발굴 및 활용</li> </ul>	
농어업 농어촌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빈집 재생 지원정책</li> <li>• 6차산업과 농촌복지정책 연계</li> <li>• 충남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li> <li>• 과소고령마을 대책마련</li> <li>• 통합적 농어촌 체험관광 추진체계 구축</li> <li>• 도시농업의 활성화</li> <li>• 교육농장을 통한 귀농귀촌 인력양성</li> <li>• 초고령화시대의 미래형 농촌마을 모델개발</li> <li>• 시군의 지역사회개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원</li> <li>• 충남내포혁신플랫폼(가칭)기반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li> </ul>	
행정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적자원 관리시스템 강화</li> <li>•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li> <li>• 금산군-대전시 통합론에 따른 충청남도 대응</li> </ul>	
사회복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li> <li>• 공공어린이집 확대</li> <li>• 독거노인공동생활제도 확대</li> </ul>	
지역도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지역구조 재편 (리노베이션)</li> <li>•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대응</li> <li>• 성장거점도시의 성장관리</li> <li>• KTX호남선 공주역 활성화</li> </ul>	
교통물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실현</li> <li>• 안전한 통학로(생활도로)시범사업</li> </ul>	
산업경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li> <li>• 충남 서비스산업 육성</li> <li>• 해양 라이프케어 산업육성</li> <li>• 지역에너지 활성화</li> <li>•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li> </ul>	
사회적경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도입</li> <li>•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li> </ul>	
문화관광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li> <li>• 역사유적 관광상품</li> <li>• 외국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li> </ul>	
교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상생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li> </ul>	
미래전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밸리 구현전략</li> <li>• 서산-당진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li> <li>• 지역소멸 정밀실태 조사</li> <li>• 대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li> </ul>	
(합계)	48		

## 2) 2017년 충남 도정 10대 아젠다 도출

● 도출된 아젠다 후보군에 대해 원내외 전문가그룹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최종 10개 의제를 도출함

- 의제 선별기준은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하고 3가지 요소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미래단 및 외부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어 최종 아젠다 선정 (부록1 참조)

● 10대 의제는 다음과 같음 (무순)

- ① **생태/문화 에코뮤지엄 추진**: 생태환경 이슈만 아니라 구체적인 생태/환경 장소(하구, 연안, 하천, 저수지 등)와 관련항 역사, 문화, 산업 등이 엮인 스토리텔링가 활동이 필요하고, 대상지의 생태, 환경, 역사, 문화, 경제를 엮어내는 에코뮤지엄(지붕없는 박물관) 활동 추진필요(예, 경기만 에코뮤지엄 포럼)
- ② **시/군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 충남도 내 시군별 에너지 생산-소비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시군 단위 에너지전환계획 수립 필요
- ③ **과소/고령마을 대책 마련**: 농어촌마을 과소/고령화는 마을 커뮤니티의 소멸 및 마을의 기능 상실,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을 가속화시켜, 이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④ **교육 상생/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충청남도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교,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도청과 시군청, 교육청이 교육사업을 협력/제휴하여 추진함.
- ⑤ **수소 밸리 구축 전략**: 수소밸리는 친환경차,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음. 수소차 부품단지 실증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에 따라 충남의 선택이 달라지겠지만, 향후 수소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매우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⑥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구조 재편(리노베이션)**: 인구변화, 사회경제구조, 지속가능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구조로 전환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충남의 지역 및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 도시의 주요패러다임 중의 하나인 압축도시와 축소도시로의 전환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화하는 것이 요구됨

- ⑦ **안전한 통학로(생활도로)시범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통학로를 포함한 생활도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자전거 등 교육약자의 보행권, 안전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발전요소 개발 등 충남형 통학로 안전모델을 구축함.
- ⑧ **해양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헬스케어, 웰니스, 뷰티, 향노화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 ⑨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거점마리항의 지정 등 충남의 마리나항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의 구축이 요구됨
- ⑩ **서산/당진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 충남의 현 정유, 철강산업은 환경규제 및 경쟁격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산업의 생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고부가 소재산업에 대한 논의를 집중화하여 연구용역 등 방식을 통해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충남연구원 원내 연구진/외부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7년 충남도정 48건 의제 후보군과 10건의 아젠다를 도출함
  - 주로 문헌 리뷰를 통해 국내외 여건과 충남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
  - 48건 아젠다 후보군은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함
  - 10건 의제는 아젠다 후보군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
- 2017년은 민선6기 4년차로 도정의 성과를 가시화 및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임.
  -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책을 종합 점검하여 정상추진중인 시책은 잘 마무리하고, 미진한 시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미래먹거리인 미래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할 것임.
  - 도정시책은 성과가 분명한 물리적사업도 있지만, 3농혁신 등과 같이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하는 시책도 상존 하는 바 단기적인 평가에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해가야 할 것임.
- 따라서 2017년은 미래먹거리 발굴관련 아젠다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반이 되는 신성장동력, 환경, 생태, 해양, 교육, 에너지 관련 아젠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아젠다 실현을 위해서는 도 및 시군뿐 아니라, 도 산하기관, 민간, 기업 등이 아젠다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함
  - 다만 이 아젠다는 연구원의 제한된 환경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부록 1 : 2017년 충남도정 아젠다 후보 우선순위

분야	연번	아젠다	평균	우선순위(10간척도)			
				시의성	파급력	현실성	참신성
환경 생태 에너지	1	생태문화 에코뮤지엄 추진	8.5	10	8	6	10
	2	사군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8.8	10	8	9	8
	3	충남 에너지전환 센터 설립	8.0	8	10	6	8
	4	환경부담금 제도 개선	8.0	10	8	6	8
	5	지역 주도적 육상생태계 보전·관리	7.8	9	8	6	8
	6	자연발생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6.0	7	6	6	5
	7	라돈에 의한 주민건강피해예방·관리	6.8	8	6	7	6
	8	충남형환경보건DB구축	6.8	8	7	5	7
	9	대기오염 측정망 조기구축	8.0	10	9	8	5
	10	탄소상쇄사업 발굴 및 활용	8.0	9	7	8	8
농어촌 농어업	11	농촌 빈집 재생 지원 정책	7.3	7.7	7.4	7.3	6.6
	12	6차산업과 농촌복지정책연계	6.7	7.1	7.1	6.4	6.3
	13	충남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6.7	7.3	6.9	6.6	6
	14	과소·고령마을 대책마련	7.5	7.9	7.4	7.7	7.1
	15	통합적 농어촌 체험관광 추진 체계 구축	7.1	7.7	7.4	7	6.1
	16	도시농업의 활성화	6.9	6.9	6.9	7.3	6.4
	17	교육농장을 통한 귀농귀촌 인력양성	7.0	7.3	7.3	7.1	6.4
	18	초고령화시대의 미래형 농촌마을 모델 개발	6.7	7.3	6.6	6.6	6.3
	19	시군의 지역사회개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7.3	7.6	7.7	7	6.7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가칭) 기반 구축	6.8	6.9	7.1	6.7	6.4
	21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	6.6	7.1	6.7	6.6	6
행정	22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강화	7.3	8	8	7	6
	23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화	6.5	7	7	7	5



	24	금산군-대전시 통합론에 따른 충청남도 대응	7.3	7	8	7	7
사회 복지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5.8	6	6	6	5
	26	공공 어린이집 확대	6.5	7	7	7	5
	27	독거노인공동생활제도의 확대	5.8	7	6	5	5
지역 도시	28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지역구조 재편(리노베이션)	8.8	10	8	7	10
	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대응	8.0	10	10	5	7
	30	성장거점도시의 성장관리	6.8	7	8	7	5
	31	KTX 호남선 공주역 활성화	7.5	10	8	7	5
교통 물류	32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실현	6.5	7	9	5	5
	33	안전한 통학로(생활도로) 시범사업	8.8	10	10	10	5
산업 경제	34	충남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7.5	9	8	7	6
	35	충남 서비스산업 육성	8.8	9	9	8	9
	36	해양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	9.0	9	9	9	9
	37	지역에너지 활성화	7.5	8	7	8	7
	38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5.8	5	6	5	7
사회적 경제	39	충남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도입	7.5	8	8	7	7
	40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6.5	6	7	7	6
문화 관광	41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8.0	8	9	8	7
	42	역사유적 관광상품	8.0	8	8	9	7
	43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전개	7.8	9	7	8	7
교육	44	교육상생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9.0	9	9	9	9
미래 전략	45	수소 밸리 구현 전략	7.5	8	8	6	8
	46	서산 - 당진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7.5	9	8	6	7
	47	‘지역소멸’ 정밀 실태 조사	7.5	8	8	8	6
	48	대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7.3	7	9	7	6

※ 여성, 다문화부문이 누락되었음 :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 필요

## 부록 1 : 2017년 충남도정 아젠다 후보군 일람

분야	연번	어젠다 후보	현황	중요성
환경·생태·에너지	1	생태·문화 에코뮤지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비전, 연안·생태복원, 삽교호수계 오염총량제 등 생태·환경 분야의 선도적인 사업들을 추진</li> <li>▶ 행정 주도, 하드웨어 중심 사업 추진으로 인해 구체적인 장소에 기초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 및 복원된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활용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역량 강화 필요</li> <li>▶ 생태·환경 이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태·환경 장소(하구, 연안, 하천, 저수지 등)와 관련된 역사, 문화, 산업 등이 엮인 스토리텔링과 활동이 필요함</li> <li>▶ 복원사업 전부터 대상지의 생태·환경·역사·문화·경제를 엮어내는 에코뮤지엄(지붕없는 박물관) 활동 추진 필요 (참고. 경기만 에코뮤지엄 포럼)</li> </ul>
	2	시·군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너지계획은 시·도 단위에서만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현재 시·군 단위에서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 및 전략 수립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내 시·군별 에너지 생산-소비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이 절실함</li> <li>▶ 시·군 에너지전환계획 수립 시 충남도의 사업비 매칭 필요 (참고. 경기도 10개 시·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사례, 전주시 지역 에너지계획 수립 사례)</li> </ul>
	3	충남 에너지전환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은 에너지복지,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자립마을(자립섬) 육성,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하지만, 현재는 각각의 정부 보조사업 신청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 역량의 한계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내 에너지전환 센터를 설립하여, 에너지복지,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자립마을 육성,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등을 충남의 여건에 맞게 체계적, 종합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조직 필요(충남 FIT 제도 운영 등)</li> <li>▶ 행정 주도가 아닌 에너지 산업, 시민사회 그룹, 사회적경제 그룹, 주민 조직 등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참고. 경기도 에너지센터,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례)</li> <li>▶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율 인상,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자체 배분 등을 통해 충남 에너지전환 기금 마련 필요</li> </ul>

4	환경부담금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은 지자체 행정구역 내 환경오염 유발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징수하지만, 징수액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정부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환경오염 상태 및 여건에 따라 더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지역환경 기준 설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li> <li>▶ 환경 관련 부담금의 부과 기준(배출허용기준, 부과대상, 부과율 등)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의 환경개선 활동에 사용하도록 배분 필요(참고. 생태보전협력금 징수액의 50% 지자체 배분)</li> </ul>
5	지역 주도적 육상생태계 보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은 전국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단위의 중요 산림 생태축 및 논습지를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다양한 지역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재 두 공간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생물다양성협약에 의해 우리나라 역시 육상생태계의 17%를 보전하도록 권고 받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보전관리가 필요한 중요 산림과 논습지를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유지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제도도입 타당성 및 국가적 지원을 위한 타당성 등을 마련할 수 있음</li> </ul>
6	자연발생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자연발생석면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홍성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내 자연발생석면 지질대를 중심으로 한 노출 위험 최소화 대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며, 지질대 주변 주민들과 위해도 소통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li> </ul>
7	라돈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돈은 자연방사성물질로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며 충남의 경우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수치가 높아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방법(키트사용), 예방수칙 제작 및 배포, 주택설비 개선 등을 통해 건강피해 예방관리</li> </ul>
8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경우 석면, 석탄화력, 산업(철강)단지, 송전탑, 라돈, 환경성질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염려가 커지고 있으나 자료 등의 부재로 건강피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형 환경보건 DB 구축을 통해 환경보건감시체계 운영, 지역환경규제 기준 설정, 도민과의 위해도 소통, 충남의 환경성 질병부담률 추정, 환경오염 노출 저감에 의한 건강편익 예측, ICT 기반의 충남 환경보건기술 연구개발 등에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li> </ul>
9	대기오염 측정망 조기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와 더불어 도내 측정망 미흡으로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배출오염원으로 인한 우리도의 오염 유발지역 이미지 탈피와 관련 정책에 대한 도민 불신,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 등 관련 연구와 정책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함</li> </ul>
10	탄소상쇄사업 발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기여 및 배출권거래제 본격시행에 따라 도내 다양 탄소상쇄제도 발굴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배출권 할당업체의 자체감축한계에 따른 경제, 환경 등 지역의 미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상쇄사업 활용체계 구축이 필요함</li> </ul>
11	농촌 빈집 재생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농촌 빈집은 전국의 13%인 6,600동(2015)로 파악됨.</li> <li>▶ 농촌 빈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귀농귀촌인은 주택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li> <li>▶ 전체 실거주 농가의 30%가 독거노인으로 파악됨(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빈집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농촌경관 관리</li> <li>▶ 귀농귀촌인의 마을 활력 및 지역활력 기대</li> <li>▶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확대</li> <li>▶ 일본의 경우 빈집을 갤러리, 가공시설로 재생하는 사례가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빈집을 호텔이나 게스트 하우스로 개조하여 귀</li> </ul>

필요 과제			독사 문제, 빈집의 창출, 휴경지, 한계마을) ▶ 농가빈집 실태조사 필요(사진자료, 독거노인현황 등)	촌인이 경영하는 경우가 있음.
	12	6차산업과 농촌 복지 정책연계	▶ 6차산업화 두레기업 등 다양한 농촌 소득사업이 전개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성 목적에 치중 ▶ 기관별·부서별 칸막이 사업추진으로 정책 및 사업추진으로 사업비낭비 및 효율성 저하	▶ 소득사업과 복지사업의 융복합모델 추진으로 고령농 소득안정과 가능 ▶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정착할 수 있음
	13	충남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 현재 수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적 참여가 미비하나,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중 FTA 등을 통해 충남 수산물의 유통·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산업화 추진 의지 강함	▶ 국내 수산물의 유통비용은 소비자가격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충남에는 수산물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이 부족하여, 충남 수산물이 서울 또는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가서 재분배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음. 이에 충남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통구조 효율성 제고 필요
	14	과소·고령마을 대책마련	▶ 농어촌마을의 과소·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이 부재한 실정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됨	▶ 농어촌마을의 과소·고령화는 마을 커뮤니티의 소멸 및 마을의 기능 상실,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15	통합적 농어촌 체험관광 추진 체계 구축	▶ 충남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산과 바다, 농업과 어업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 농어촌체험관광이 활성화가 기대되나 그 추진체계가 미흡	▶ 충남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발달, 자유학기제 시행, 백제문화유산의 부각, 서해안권역 관광지 개발과 대중국 여객선 취항 등으로 향후 충남도 농어촌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대한 대비 필요
	16	도시농업의 활성화	▶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충남도는 관련정책이 전무한 실정임	▶ 도시농업은 소비자가 농작물 재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교육이 되는 장점을 가짐. 또한 토종씨앗 및 생태농업 등과 접목함으로써 로컬푸드, 안전한 먹거리 등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17	교육농장을 통한 귀농귀촌 인력양성	▶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실정임. 아울러 농촌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귀농귀촌인구가 지역사회와 융화되는데 한계가 있음.	▶ 농촌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농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귀농귀촌인구의 체계적인 교육과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임. 아울러 농촌마을을 기반으로 한 교육농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향후 귀농귀촌인구의 지역사회정착이 용이할 것임(대표사례: 홍성군의 젊은 협업농장)
	18	초고령화시대의 미래형 농촌마을 모델 개발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한 가운데 농업 생산과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함	▶ 농촌 마을이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델 사업이 필요함. 예를 들어, 깨끗한 마을가꾸기, 마을 집단영농 조직화, 수요기반형 통합복지, 어린이와 노인의 3세대 공생 등

	19	시군의 지역사회개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	▶ 마을만들기와 6차산업,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등의 영역에서 행정 사업별로 정책의 집행체계가 단절화되고 중간지원조직 설립 논의도 분산되어 있음	▶ 농촌지역사회개발의 관련 정책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인적 자원을 공유하여 현장에 밀착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관련 영역의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함
	20	충남내포혁신 플랫폼(가칭) 기반 구축	▶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였지만 다양한 민간 활동의 거점공간은 형성되지 못하고 민관협치의 도정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집중적이지 못함	▶ 내포신도시내에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인권, 적정기술, 자원봉사, 사회복지, 평생학습 등의 중간지원조직이 거점공간을 형성하는 내포혁신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민관협치의 도정 실현을 적극 지원함
	21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제고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가격 차별화와 판로 확보, 브랜드 난립,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어려움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공급의 양적, 질적 협력시스템 구축, 생산-유통-가공-소비의 연계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및 가격경쟁력 제고에 의의가 있음
행 정	22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강화	▶ 조직내부의 인적자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이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조직과 인사, 교육이 각 개별로 추진되고 있어 이의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도정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정 성과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의 활용에 있으며 인적자원의 역량과 조직의 연계를 통한 성과창출 기반의 조성은 기타 모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초라 할 수 있기에 조직과 인사,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함
	23	성과관리시스 템의 체계화	▶ 현재 충남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지표들과 함께 성과관리체계가 운영 중에 있음. 자체평가 및 실국장 평가를 비롯하여 지속가능지표 등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의 실효적 운영시스템이 필요함	▶ 도정의 성과를 관리하고 향상시키며 이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실무 및 관리에는 여러 한계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하여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시스템과 조직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가시화 할 수 있음
	24	금산군-대전시 통합론에 따른 충청남도 대응	▶ 지난 6월 초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지속적인 이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금산군의 여론동향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위험성 커질 수 있음	▶ 충청남도의 관할구역 및 인구 유지를 위해 통합론 이슈의 본질을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응논리 및 필요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사 회 복 지	25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지역사회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 또한 확대되었지만 일선현장에서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그대로인 답보상태임	▶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역할에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으로 기능강화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들과 연계, 협력 강화 ▶ 보건·고용·교육·주거·문화 등 확대 연계로 민간자원의 발굴 및 개발이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활성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지역 도시	26	공공 어린이집 확대	▶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민간에 의해 맡겨져 운영되고 있고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열악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전국율은 5.18%에 비하여 충남은 3.11%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li> <li>▶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는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육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li> </ul>
	27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의 확대	▶ 충청도에서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청양군은 독거노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취사와 숙박만 공동거주생활 공간에서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나 충청도 모든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독거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충청도 15개 시군에 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와 관련 대전시는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한 바 있고 서울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28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의 지역구조 재편 (리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지역 및 도시구조의 건강성, 효율성, 미래적응성이 확보된 도시구조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도시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li> <li>▶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구조, 도시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되지만, 현재의 상태(인구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와 토지이용, 공공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입지 등)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변화, 사회경제구조, 지속가능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구조로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충청도의 지역 및 도시정책, 산업정책 등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는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임</li> <li>▶ 따라서 충남의 지역 및 도시구조에 대한 분석, 도시의 주요 패러다임 중의 하나의 압축도시와 축소도시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정책화 하는 것이 요구됨</li> </ul>
	2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물리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도록 방침을 시달하였음</li> <li>▶ 도내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 면적(393.6km<sup>2</sup>) 중 76.5%(301.1km<sup>2</sup>)가 미집행되었는데, 특히 10년 이상 미조성 도시공원은 26.2km<sup>2</sup> 규모로 토지보상비만 1.1조원에 달하는 실정임</li> <li>▶ 문제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도로나 공원에 대해 별도대책이 없으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그 피해는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 차원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일선 시·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해야 함</li> <li>▶ 이를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도시계획시설 배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방안이 요구됨</li> <li>▶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가이드라인 개발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역의 창조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li> </ul>
	30	성장거점도시의 성장관리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서북부지역(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아산신도시 해제지역 등), 공주시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주변지역, KTX 역세권 등에서 경관적·환경적 난개발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성장거점(혹은 신성장거점 해제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li> <li>▶ 성장관리방안은 성장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한 개발을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함</li> <li>▶ 이를 위해 충청남도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성장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함</li> </ul>

	31	KTX 호남선 공주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의 공주역('15년 3월 개통)은 충청남도 낙후지역에 위치한 정차역으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공주역 활성화 방안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X 공주역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에 의한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이자 세종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금강코리도(Corridor)의 중간기착지라 할 수 있음</li> <li>▶ KTX 공주역은 세종시 남부 관문역으로 기호유교문화권, 백제문화권의 결절지역임</li> <li>▶ KTX 공주역은 미래주력산업인 BT·IT산업과 국방산업을 새롭게 결합한 차세대 융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국방혁신거점으로 중요한 지경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li> </ul>
교통물류	32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상에 2건의 신규사업(아산석문산단선, 호남선 가수원~논산 구간 고속화)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의 가시화를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통과가 필요한 상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산 석문산단선은 향후 대산항선(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의 추가 검토대상사업)과 연계되어 대산항까지 철도물류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철도노선임. 또한,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사업은 기존의 굴곡노선을 직선화시켜 여객철도 수송에 있어서 시간적 단축과 지역 간 접근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함</li> </ul>
	33	안전한 통학로(생활도 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생활도로 교통안전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심각하여, 충남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는 국내 10대 사망원인으로 중 하나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li> <li>▶ 특히, 통학로를 포함한 생활도로는 어린이, 노인·장애인, 자전거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안전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을 통한 실효성 확보와 발전요소 개발 등 충남형 통학로 안전모델을 구축해야 함</li> </ul>
산업경제	34	충남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소연료전지차 이외에는 아직까지 미래 충남을 이끌 핵심 산업이 명확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의 미래를 이끌 확실한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li> </ul>
	35	충남 서비스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충남도 지원정책은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있어,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 제조업이 세계적인 경제위기, 신흥국의 도전으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li> </ul>
	36	해양 라이프케어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거대 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 양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헬스케어, 웰니스, 뷰티, 향노화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신성장 동력화</li> </ul>

	37	지역에너지 활성화	▶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심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원전 안전의 경각심 고조, 2015년 파리협약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음. 더불어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형 에너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음	▶ 지역별 신재생에너지잠재량 산출, 지역별 에너지소비량 정책목표 제시 등을 통해 지역별 집중화, 특성화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굴. 도, 시군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 기대
	38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 수도권과의 경제산업적 연관성은 높으나 충북, 경북 지역과의 경제적 교류 및 연관성은 낮음	▶ 향후, 한반도 허리경제권 축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통해 대중국 교두보 건설
사회적경제	39	충남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도입	▶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제도권에서 금융소외의 사각지대에 있음.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인 욕구충족의 특수한 활동영역은 이에 적합한 지원의 금융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임.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형성과 활동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신뢰기반의 사회적금융 도입은 시급함.	▶ 기업성과나 자금조달이 어렵고 경제적 성과 보다 사회적 성과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있어서 이에 적합한 성격의 사회적금융제도의 도입은 현 경제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 단순한 이윤창출을 넘어 고용·복지 등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기업들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제도 도입은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적으로 사회적금융제도의 도입이 현재 정책적 화두임.
	40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 충청남도에서 천안 등 도심공동화와 농촌의 빈집발생과 같은 유희공간·자원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의 방향으로 유희공간을 비롯한 유희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의 방식에 대해 영국과 서울 등 국내외 지역들은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여 산업·고용·지역발전 등 다양한 영역의 적용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충청남도는 아직 공유경제의 방향설정이나 실태파악도 미흡함.	▶ 충남에서도 천안구도심 등 도심공동화의 새로운 재생방향이며 농촌지역의 유희공간과 자원들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식으로 공유경제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음. 유희자원들의 활용과 함께 지역의 사회적자본 및 공공성에 기반한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 가치회복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크다고 봄.
문화관광	41	해양 레저관광 기반조성	▶ 당진 마린시설 조성 등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별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 기반시설을 조성 중 ▶ 태안-보령 연육교 건설에 따른 원산도 지역이 주요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 중	▶ 관광의 행태가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미래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해양레저 부분에 대한 기반마련이 필요 ▶ 지자체별 특색있는 시설 조성과의 연계성을 통한 충남 서해안 전체의 해양레저 기반마련 필요
	42	역사유적 관광상품	▶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1주년이 되었으며,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상품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충남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남의 대표 상품으로서 역사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 마련 필요
	43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 충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경우 전체 1.2%로 전국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 필요



		전개		
교육	44	상생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교육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이 어려움	▶ 충남도청과 시군청의 일반자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자치가 협력 및 연계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할 필요성 대두
미래전략	45	수소 밸리 구현 전략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증사업은 올 하반기에 추진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연구용역도 연말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충남 수소밸리 구현 전략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수소밸리는 친환경차,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임 ▶ 수소차 부품단지 실증사업의 예타통과 여부에 따라 충남의 선택이 크게 달라지기는 하겠으나, 통과된다하더라도 그 후속 준비에, 미통과될 경우에는 그 대안 준비가 수면으로 부상할 것임 ▶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수소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매우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46	서산당진 고부가 소재산업 육성	▶ 석유화학, 철강산업이 세계적 과잉생산으로 인해 휘청이고 있으며, 충남의 서산과 당진은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 국가기초산업인 석유화학, 철강을 고부가 소재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충남의 현 정유, 철강산업은 환경규제 및 경쟁격화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산업의 생존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현재 고부가 소재산업으로의 발전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 탐색과 실천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논의를 집중화하여 연구용역 등 방식을 통해 논의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7	‘지역소멸’ 정밀 실태 조사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도 일부 시군은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군이 폐지될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다양한 방면의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기초자료의 부족이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저출산·고령화라는 일반적 진단에서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응방향의 근거를 확보해야 함
	48	대(對)중국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중간제 부품 대(對)중국 수출 특수 소멸, 급증하는 방한 요우커 충남유치, 투자유치 등 대(對)중국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도내, 그리고 도와 시·군 간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체제는 미약한 실정임.	▶ 주요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충남형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함. ▶ 도의 중화권팀과 환황해프로젝트팀의 기능과 역할 통합과 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관련 정책 연계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필요함.